

*공동세미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주거 분야의 과제

2025.7.1(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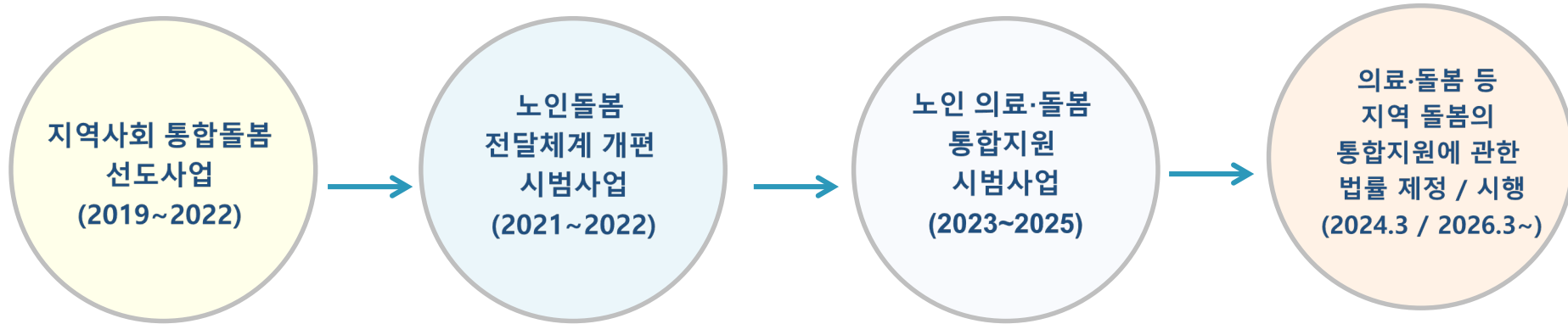
서동민 교수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경과와 의미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주거
- 돌봄통합지원의 주거지원 활성화 과제



I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경과와 의미

1. 통합지원 관련 사업 추진 경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19~2022)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통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 제시(보건복지부, 2018)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2021~2022)

- 복지부(지역복지과), 행안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주도 하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노인특화형으로 2개 지역(화성, 춘천)에서 추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023~2025)

-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 마련 목적

■ 의료·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2024.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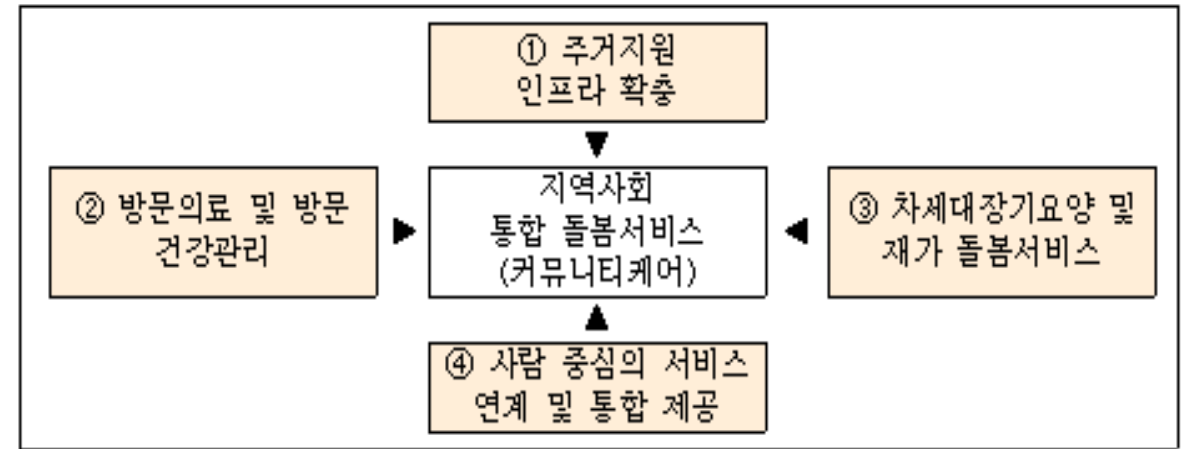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 제정(2024.3.26), 전국 시행(2026.3.27)

2.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 지역통합돌봄 기본계획상의 4대 핵심요소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방문건강. 방문의료
-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그림]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자료: 보건복지부. (2018)

■ 운영 개요

- 공통 기반(시군구 단위 전담조직,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 중심)
- 지역별 운영모형 개발
 - (시군구 단위 전담조직) 사업계획 수립·추진·모니터링 총괄 전담조직으로 주로 기초지자체 복지선임과에 팀단위로 설치
 - (통합돌봄창구)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육구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등의 업무 실시
 - (지역케어회의)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등에서 의뢰된 복합육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사례와 사람을 중심으로 필요한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
 - (민·관협의체) 다양한 공공·민관 전문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선도사업 목적·목표·계획 공유 방향 설정 등 논의

3.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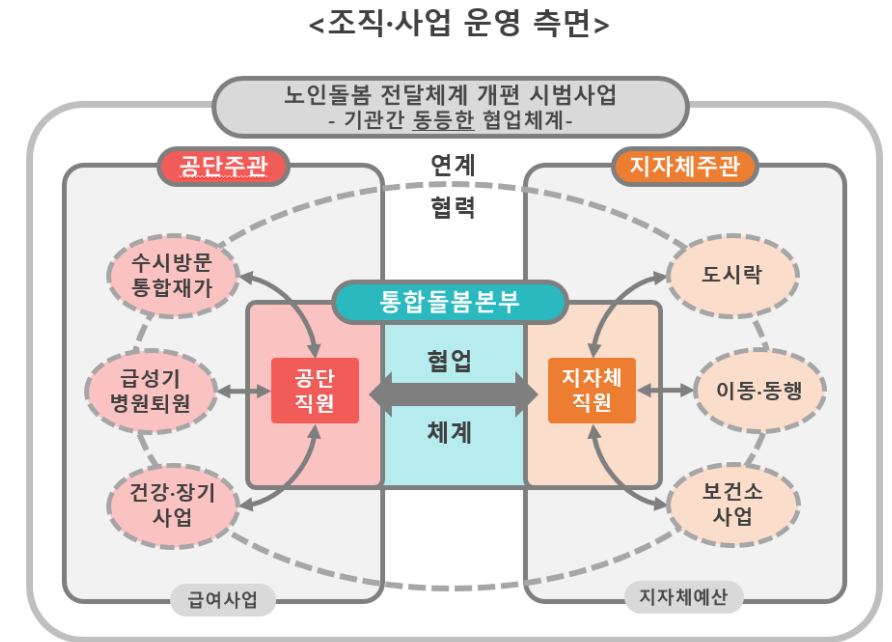
■ 사업 목적

- 건보공단의 건강·요양 정보를 활용한 통합돌봄필요도 평가·연계 체계 구축과 ‘통합돌봄본부’ 전담인력 운영을 통한 직접 참여 모형 구축

■ 배경 및 개요

- 복지부(지역복지과), 행안부(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주도하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중 노인특화형으로 2개 지역(화성, 춘천)에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추진단 주관, 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연계
- 추진체계로 화성(3개), 춘천(2개)에 권역별 ‘통합돌봄본부’ 설치
 - 지자체 공무원과 LH,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이 함께 모여 노인에 대한 통합필요도 평가 실시, 지역 내 서비스 연계·관리 등 수행

[그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기관별 역할)



※ 돌봄본부를 통한 전체(공단, 지자체) 사업 운영, 연계실적이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실적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기본 구조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서비스 연계) 의료-돌봄-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장기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 우선 연계 후 부족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개발. 제공 원칙 적용
- (주요서비스) 방문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주거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지자체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대상자 접수·발굴
- (지역사례회의) 건보공단 지사 담당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등 참여, 서비스 간 연계·조정 및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체



IV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연계 가능 서비스	37
CHAPTER	제1장 주요 서비스 내용	39
	1. 방문의료지원센터(팀)	41
	2.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서비스	45
	3. 주거지원 서비스	47
	가. 주거환경개선	47
	나. 케어안심주택	49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안내

제2장	연계 가능 서비스	55
	1. 보건의료	57
	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57
	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60
	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62
	2. 건강관리	65
	가. 방문건강관리(보건소)	65
	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67
	다. 치매관리(치매안심센터)	69
	3. 장기요양 서비스	72
	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	72
	나.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74
	4. 퇴원환자 지원	76
	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76
	나.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78
	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공공의료연계망)	82
	5. 일상생활·돌봄 지원	85
	가. 노인맞춤돌봄	85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87
	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9
	라. 통합사례관리사업	92
	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93
	6.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97
	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97
	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99

4.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참여지역 확대

- 예산지원형(12개 지역):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기술지원형(2024년, 22개 지역):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 기술지원형(2025년, 35개 지역):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써,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
- 하반기 기술지원형 추가 모집 선정(50여개 지역) *2차 추가모집 완료(30여개 지역)
- 현재, 전국 131개 지자체 참여(2025.6 기준)

4.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참여지역 확대(계속)

- 기타(지자체별 추진): 서울시 서울형 통합돌봄 추진
 - 동주민센터에 신청 시 대상자별 돌봄계획 수립 후 패키지형 지원
 - 올해 4개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내년 모든 자치구로 확대
 - 보건의료, 건강, 영양, 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핵심
 - 자치구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지역 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기관,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 최종, 7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진행 중(관악, 광진, 금천, 동대문, 서대문, 성동, 은평)
- 기술형 포함(총 12개)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등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체계



5대 분야 10개 영역 서비스 제공

1.보건의료	2.건강	3.영양	4.돌봄	5.주거
① 방문진료 - 1차 방문진료사업 등 ② 퇴원환자지원 - 영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등	① 신체돌봄 - 건강장수사업 등 ② 마음돌봄 -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상담소 운영 등	① 장기요양보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② 기타 시범사업 - 통합재가사업, 이동지원서비스 등	① 긴급돌봄 - 일시제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② 일상돌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① 환경개선 -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② 주택지원 - 노인주택지원 등

5.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공포 (2024.3.26)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 제정(2024.3.26), 전국 시행(2026.3.27)
 - 노인 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료·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조정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이용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군·구 중심의 연계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것이 핵심
 -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앙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지원, 각 지자체의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진행
 - 최근, 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2025.6.)



II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주거

1. 돌봄통합지원법의 기본 구조

- 돌봄통합지원법(법률 제20415호, 2024)은 1장 총칙,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 모두 7개 장, 30개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

장(7개)	조문(30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계획 수립 등의 협조), 제9조(추진 성과의 평가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제11조(퇴원 환자 등의 연계), 제12조(종합판정 등), 제13조(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보건의료),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제17조(장기요양), 제18조(일상생활돌봄), 제19조(가족 등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6조(시범사업), 제27조(비밀의 유지), 제28조(비용 지원 및 부담 등),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출처: 돌봄통합지원법(법률 제20415호, 2024)을 기초로 저자가 작성함.

자료: 서동민. (2025.2). 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 돌봄통합지원법의 기본 구조

■ ‘돌봄통합지원법이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치’에 주목

-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이 상충되는 경우의 우선 적용을 원칙으로 규정
- ⇒ 상위법, 특별법, 신법을 우선하는 원칙이 있음에도, 이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된 법률이 많으며, 향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개별 사항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
- ⇒ ‘주거관련 법’에서 ‘통합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예. 대상자의 자격 및 요건, 절차 등)

■ 법 명칭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상자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 그 주된 대상과 사업내용은 물론, 그 법의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중요(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 이는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상자의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실제 조항에서도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라고 명시, ‘대상자 특성 고려’, ‘관계 법령에 따라’와 같이 간접적으로 명시
- ⇒ 해당 법이 다루는 대상자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쟁점 발생의 가능성, 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2. 법의 목적

■ ‘목적(제1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논의사항

-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를 함께 적용하는 구조
- ⇒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는 AIP(aging in place)라는 정책 및 실천 원칙
 - [가능한 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익숙한 장소(공동체)에 남아서 생활하기 (Harris, 1988: 18; Frank, 2001에서 재인용)
 - 시설보다는 독립성을 지니면서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남아서 생활하기 (Davey, et al., 2004 ;)
 - 시설에서의 자율권 강화(Chapin, et al., 2001) – 시설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기,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기
 - 집과 지역사회와 같이 애착 및 연결, 안정성과 유사성을 가지는 것(Wiles et al., 2011)
- ⇒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에게 집과 지역사회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중요성을 가짐 (UN의 비엔나 국제고령화 계획, 1982)
- ⇒ 물리적 공간이면서 기능적 공간으로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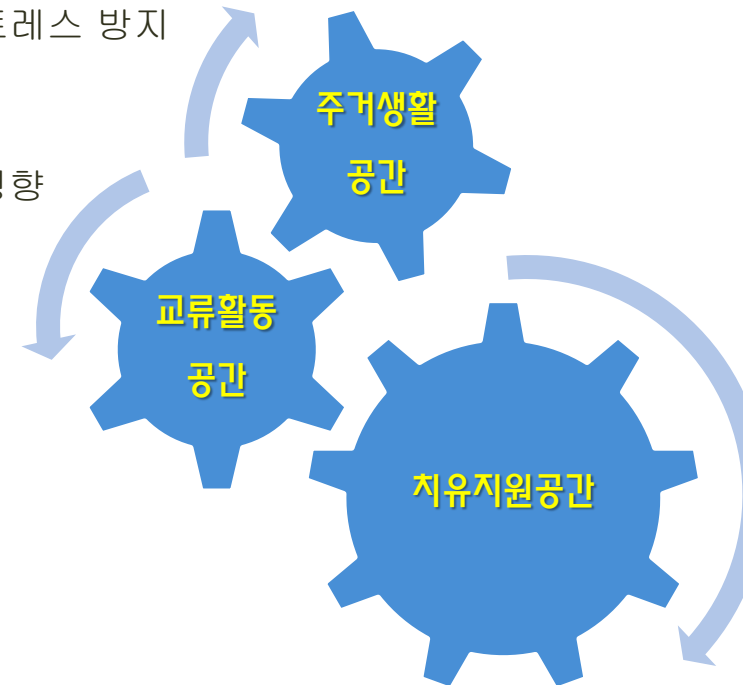
2. 법의 목적

■ 돌봄 관점의 노인주거 기본 방향

- 노인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

■ 고려사항

- 탈시설 친가정적 환경 구축
 -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고려, 노인의 능력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한 환경
- 치유적 환경조성: 심리적 지지를 얻도록 조성, 감각적 쾌적함, 소음이나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 방지
- 독립성의 유지: 신체적 심리적 재활에 도움, 존엄성과도 높은 관계
- 가변성 고려: 미래의 변화까지 고려한 융통성과 가변성 확보
- 지역문화적 특성 반영: 노인들의 특색 있는 고유한 주거문화 반영, 주거의 질 향상에도 영향
- ‘정주성(aging-in-place)’ 활성화
- ‘범용성(universal)’ 구현
- 안전성 보장
- 자립성 유도
- 관리성 제고
- 쾌적성 증진



3. 정의

■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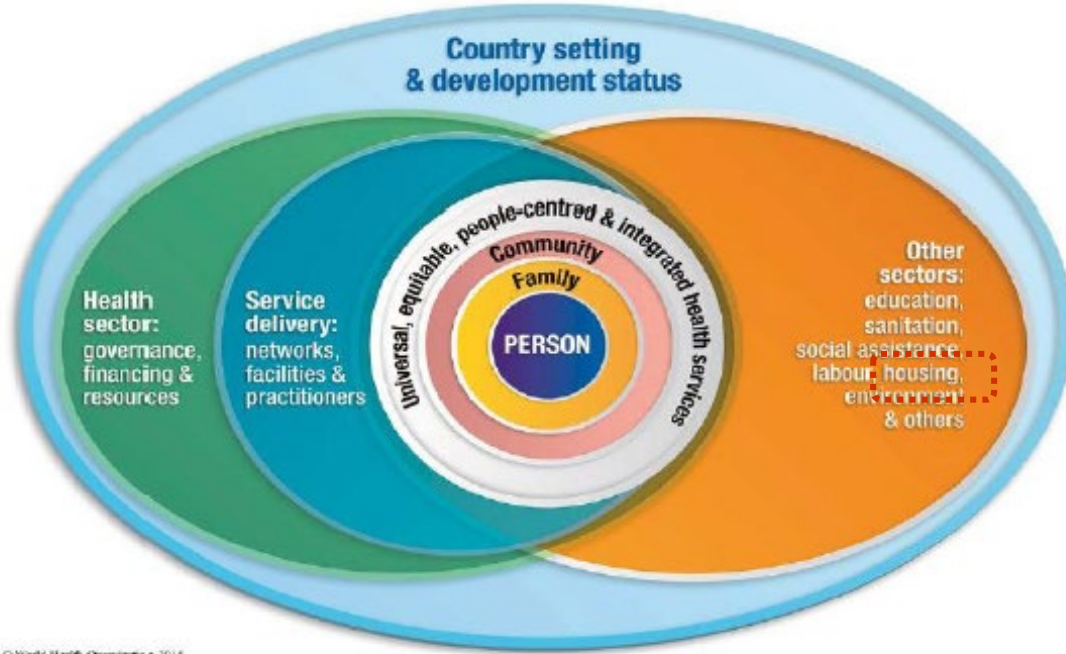
-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논의사항(통합과 지원)

- 통합지원의 주체와 범주, 대상자의 범위, 관련 기관의 성격과 같은 중요 사항을 규정
 - 대상자로 노인, 장애인 구체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 규정(65세 이상, 심한 장애)
- ⇒ 통합지원(서비스)에 ‘주거’ 포함(단,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지 않음)

3. 정의

WHO framework for person-centred and integrated 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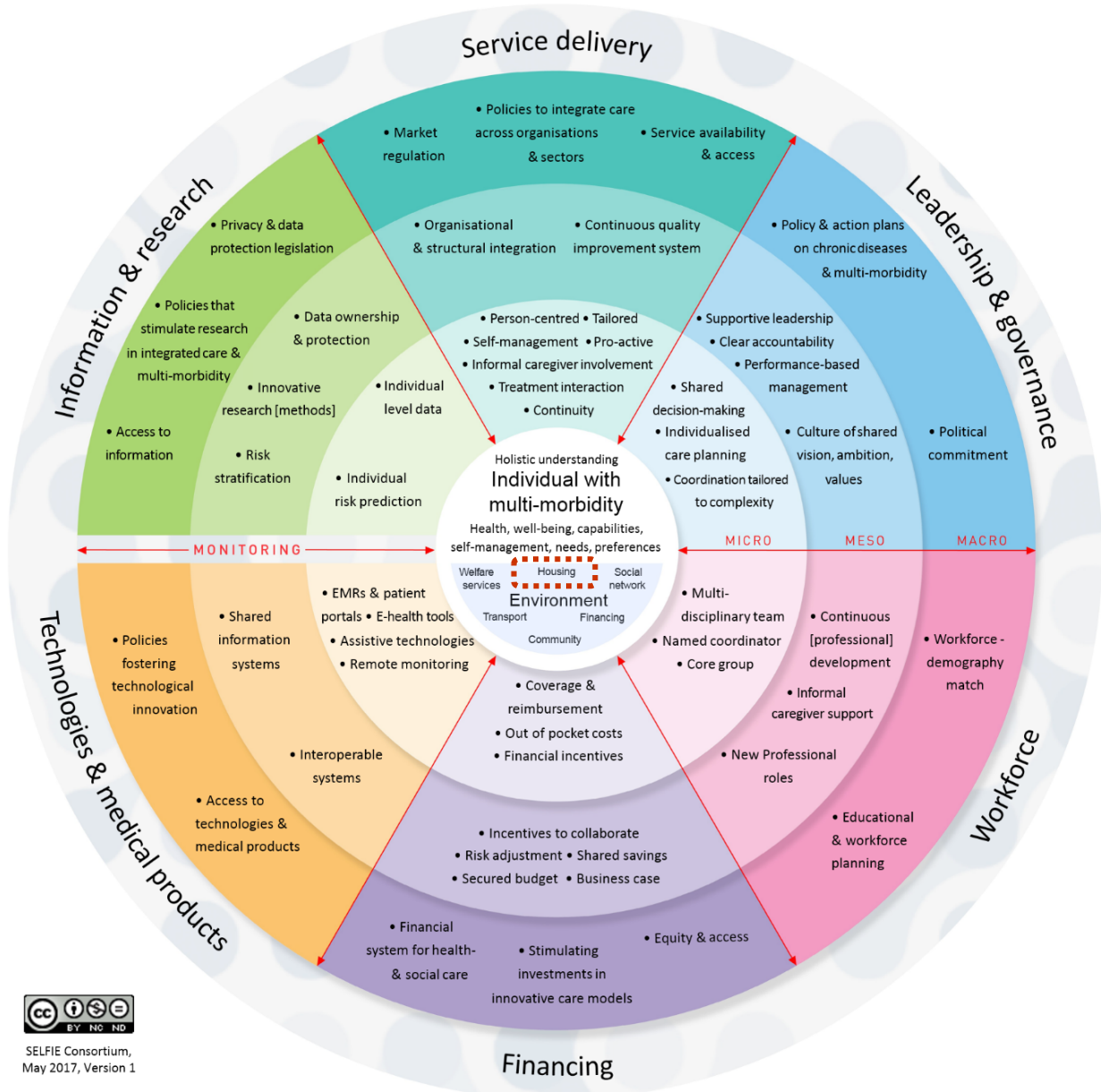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Source: WHO global strategy on people-centred and integrated health services. Interim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2015 (WHO/HIS/SDS/2015.6; <http://www.who.int/servicedeliverysafety/areas/people-centred-care/global-strategy>)

그림. 제목사람 중심의 통합 건강서비스 개념들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구성요소

자료: WHO. (2015). WHO global strategy on people-centered and integrated health services. Fig 1

Conceptual framework for people-centered and integrated health services



SELFIE Consortium,
May 2017, Version 1

3. 정의

■ 논의사항(통합돌봄과 돌봄통합지원에서 주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초기, 지자체의 역할로 지역 자체의 특화서비스 확충과 제공을 통한 모형 개발에 초점, 돌봄통합지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전국 단위의 표준적 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강조
 - 실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025)’에서도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
- 시범사업 매뉴얼(보건복지부, 2023)에서는 방문의료지원센터,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주거지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와 함께, 연계 가능 서비스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일상생활·돌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을 제시
 - ⇒ 이러한 전환을 전략적 접근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나, 지역 수준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현존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
 - ⇒ 주거와 관련한 새로운 또는 지역단위의 별도(특화)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

IV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연계 가능 서비스	37
CHAPTER	제1장 주요 서비스 내용	39
	1. 방문의료지원센터(팀)	41
	2.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서비스	45
	3. 주거지원 서비스	47
	가. 주거환경개선	47
	나. 케어안심주택	49
	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52

맞춤형 공용주택 "일동 케어 안심주택"



3. 정의

■ 논의사항(통합지원 관련기관과 주거)

-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제공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 법에서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제시
- 통합지원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제15조~제19조)으로 개별 기관이나 사업보다는 넓은 범주 수준에서 규정
 - 설립주체는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설립 및 운영 주체 포괄

⇒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관련하여, ‘주거’는 ‘일상생활돌봄(제18조)에 부분적으로 명시

⇒ ‘주거지원서비스’의 성격 명확화 필요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 3.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 4.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 논의 사항

-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추구하는 원칙과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실현해야 할 사항들을 차례로 제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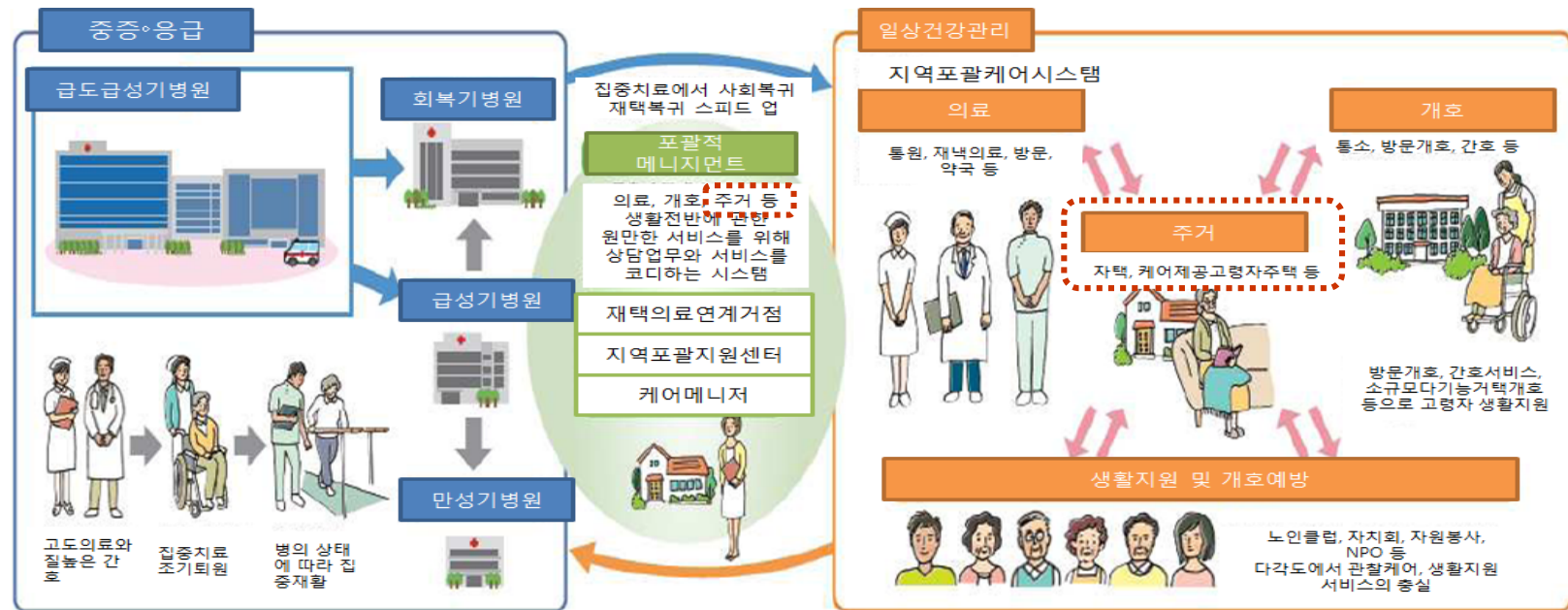
■ 논의 사항

- 첫째,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야 하며, 서비스로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음
 - ⇒ 예방적 건강관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생애말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의미도 큼
 - ⇒ 주거공간에서의 생애말기, 죽음에 대한 대응체계?
- 둘째,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을 명시
 - 그동안 다양한 퇴원환자관리 및 지원사업들 추진해옴. 의료기관 인증제의 퇴원환자 지원 내용,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사업,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거점병원 운영 및 연계지원사업, 급성기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등
 - ⇒ 이러한 사업들은 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과 관련한 개별 사업의 형태로 진행,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컸던 것은 아님
 - ⇒ 주로 퇴원을 시키기 위한 기관 내 활동에 중점을 둔 것으로, 퇴원 이후에 지역이나 재가에서 필요한 지원 활동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었음
 - ⇒ 그동안 단선적으로 접근해 오던 퇴원 및 퇴소에 따른 지역복귀(come back)라는 방식을 넘어, 지역생태계로서 순환체계를 운영(home → community → institution → community → home)한다는 측면이 강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논의 사항(계속)

- 셋째, 지자체가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주문
- ⇒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대상자의 결정권과 시설과 재가 등의 협력기반을 마련한다는 점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AIP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
- ⇒ AIP는 삶터에서의 요양, 정주성 확보, 정든 곳에서 늙어갈 권리 등으로, 단지 재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을 포함하여 자율성과 선택권, 가정다움이 지원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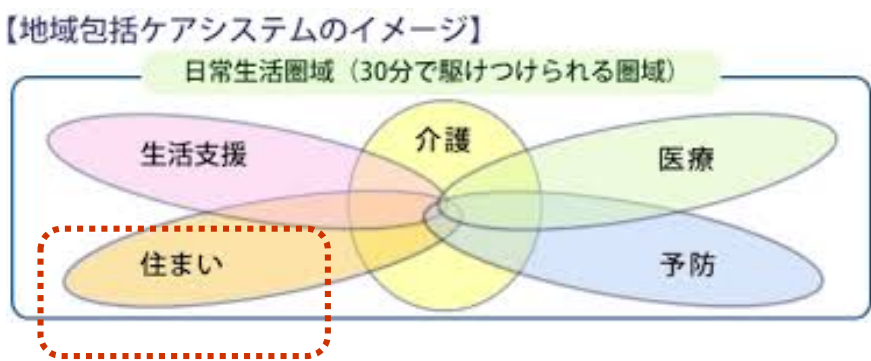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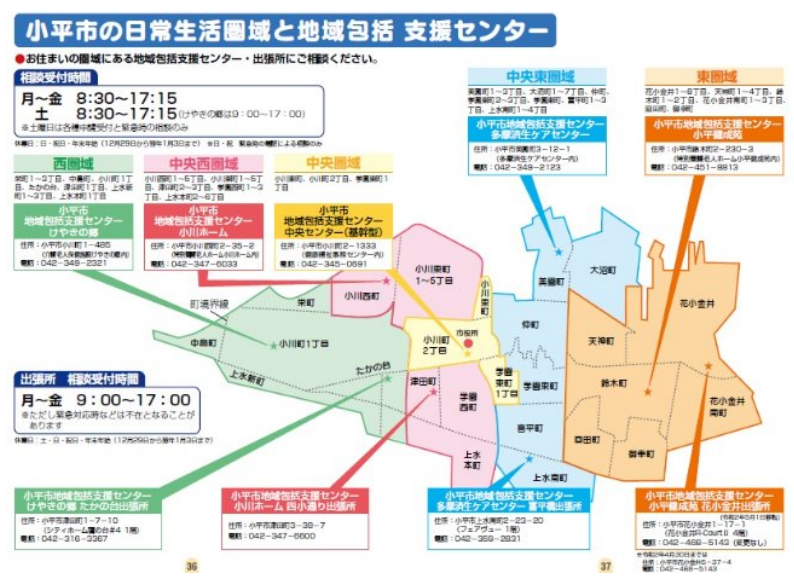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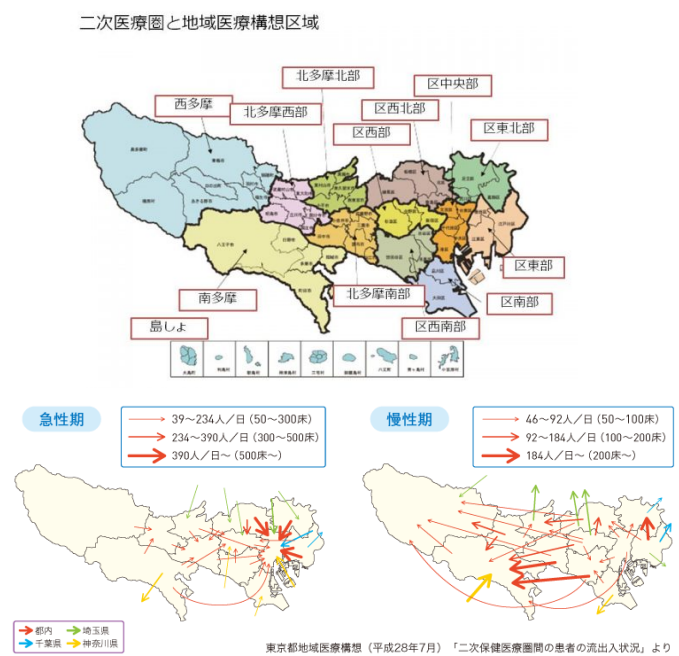


[그림]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상(개혁 후의 의료·개호서비스의 제공체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논의 사항(계속)

- ‘생활권’ 단위는 돌봄통합지원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법 명칭에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될 것임
 - 커뮤니티케어는 주고 받는 서비스 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교환되는 지역에 방점(정형선, 2018)
 - 지역이 지칭하는 범위와 지향하는 강조점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개인 개인이 삶을 유지하는 지역이 모든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二木立, 2018)
 - 일본은 지역사회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종의 ‘권역’의 개념 도입 / 일상생활권, 구성요소로 주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논의 사항(계속)

- 넷째, 통합지원 대상자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 ⇒ 대상자는 설명과 ‘상담을 받을 권리’를 가짐. ‘상담권’이라는 개념으로 확장 제안
 - ⇒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은 돌봄대상자가 제한을 가진 자로 지닌 취약성과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로서 지닌 의존성과 관련하여,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며, 개인의 자립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이슈로 연결, 제도적인 보장 필요
 - ⇒ 자신의 주거를 결정할 권리(재가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 ⇒ 주거를 둘러싼 문제, 의사결정은 지역 실천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

5.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논의 사항

- 첫째, 주로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5년을 주기로, 지역은 4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 5년 주기 기본계획에 기반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4년 주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결성이나 정합성도 함께 고려 필요
- 둘째, 정부 실태조사가 법정조사로 이루어진다면, 조사구에 의한 방식으로 누락되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계획수립 등의 협조에 있어, 지자체가 자료제공 등을 협조할 수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그 자료의 범위와 협조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공식화하여야 만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권고적인 성격에 그칠 가능성이 큼

6. 통합지원절차

■ 제10조(신청·발굴 및 조사 등)

-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사·정보분석 등을 통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통합지원 신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려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판정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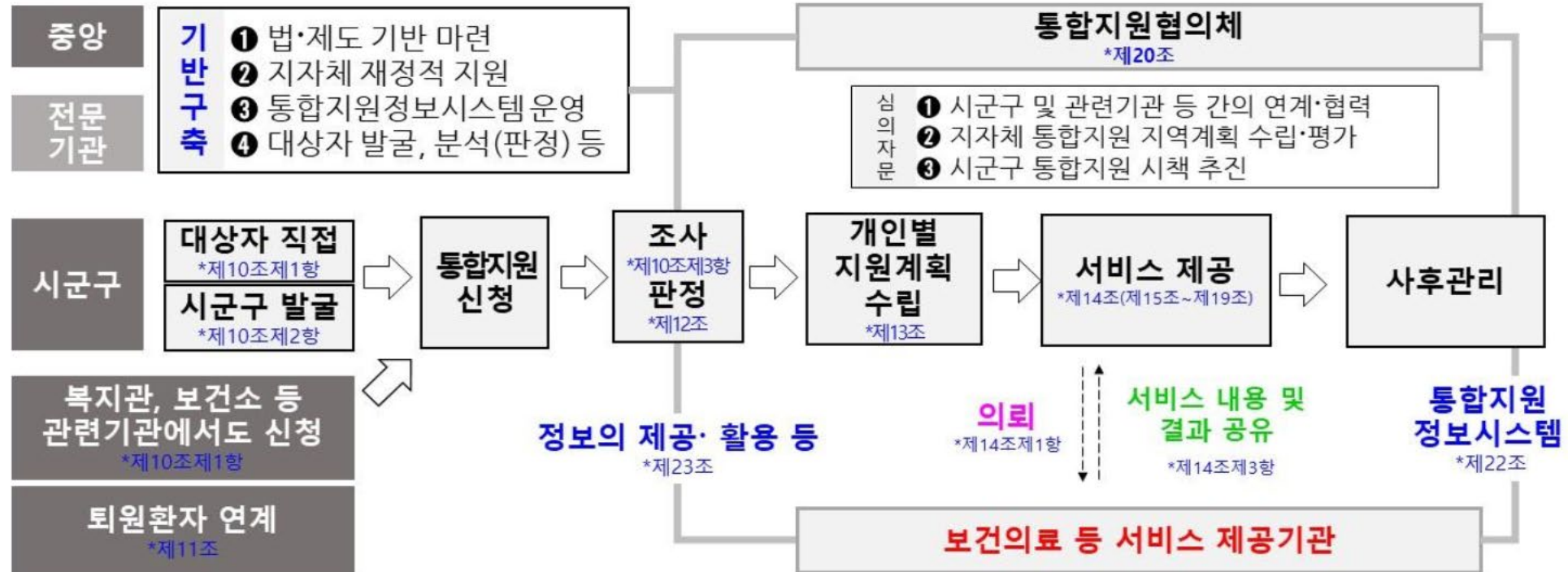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통합지원절차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개념도 >



6. 통합지원절차

■ 논의 사항

- 종합판정은 통합지원을 다른 전달체계와 구분하는 특징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종합판정과 관련하여,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2023~)이 실시 중으로, 개인의 의료·요양 필요도, 생활 여건 등 종합 평가해 요양병원(의료), 시설·재가급여(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돌봄) 등으로 연계하는 도구로 성격
 - 종합판정 또는 통합판정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구 자체의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부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의료 및 요양, 돌봄 등 관련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일정 수준을 확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개인별지원계획이 실질적인 ISP(Individualized service plan)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담당 조직의 구성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실제 반영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함
 - 지자체가 통합지원을 의뢰할 통합지원 관련기관도 통합지원 절차 내에서 기관 및 사업의 특성이나 자체 전달체계와 상충됨이 없이 의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인지를 파악하여야 함
- ⇒ 종합판정(통합판정) 항목이나 절차에 ‘주거’와 관련한 사항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것이 주거 관련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6. 통합지원절차

- 시행령(안)
 - ‘종합판정’ 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
 - 시행령에서 유일하게 주거 명시된 부분

제5조(종합판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판정은 대상자의 노쇠·장애의 정도 등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영위 능력,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 필요성,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및 일상생활 돌봄 필요도 등을 판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항의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7.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 제15조(보건의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 2.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 4. 장기입원 및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 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사업
 - 6. 방문 구강관리
 - 7.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의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장기요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일상생활돌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 등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 논의 사항(계속)

-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규정(제2조의 3)하는 것과 연결
 -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확대해야 할 통합지원 서비스의 범주가 되며,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 제공자 관점에서 보자면, 통합지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제공기관의 유형을 결정짓는 사항
- ⇒ 따라서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제공기관이나 단체와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포함되지 못했거나 제외된 서비스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 ⇒ ‘주거’는 ‘일상생활돌봄(제18조)’의 일부로 명시, 정의(제2조)에서는 대등하게 나란히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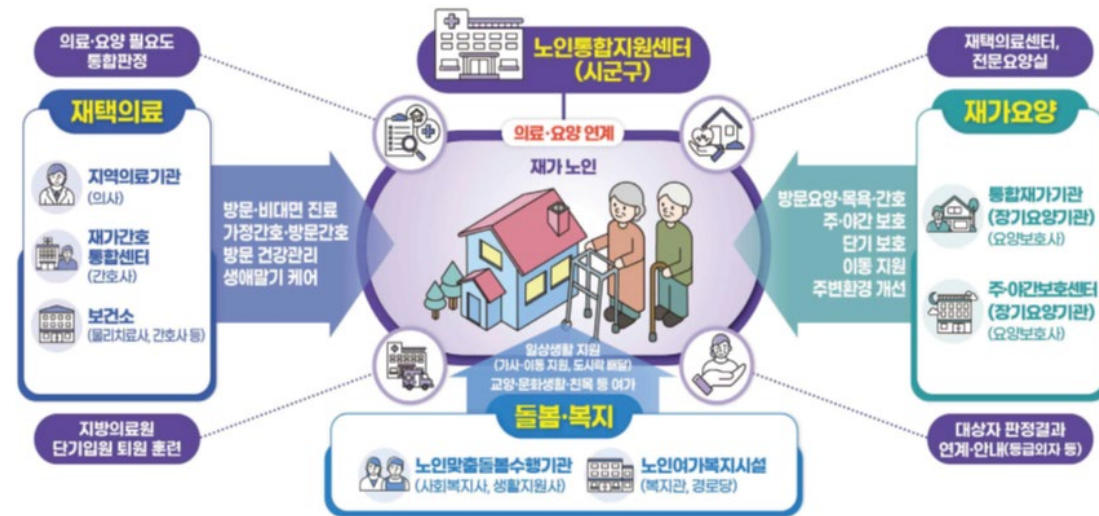


그림.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자료: 보건복지부, (2024).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통합지원 절차 운영과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연계하는 업무(이하 “통합지원 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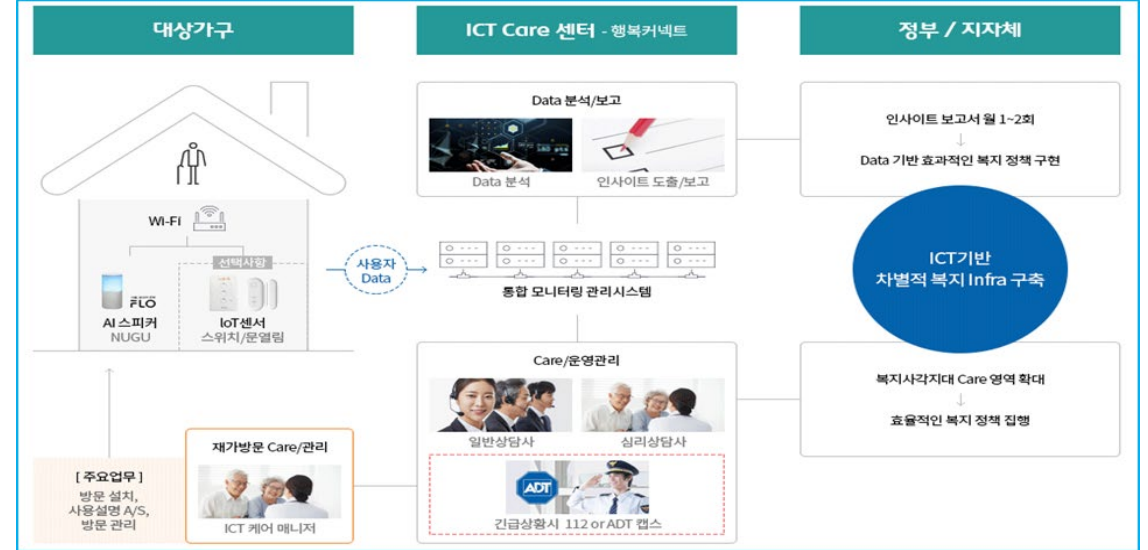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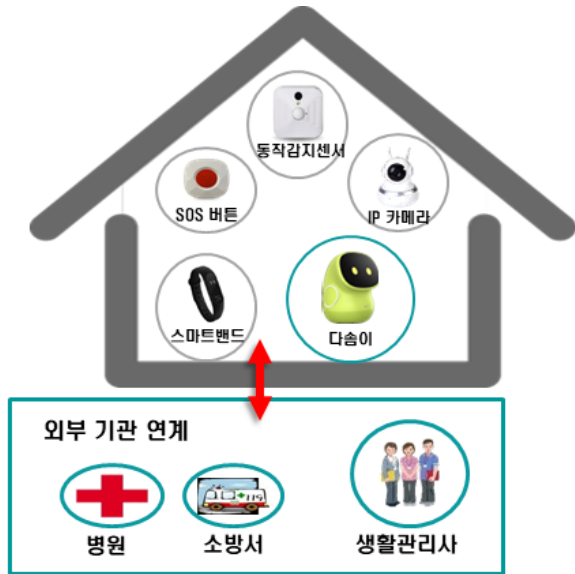
■ 논의 사항

- ‘통합지원협의체’
 - 통합지원협의체는 일종의 지역 민관협력, 로컬 거버넌스 조직으로 성격을 지니며, 별도로 설치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함
 - ⇒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기관은 협의체에 포함되는가(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
- 전담조직
 - 시범사업은 물론,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별도의 과나 팀을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
 -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의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을 아우르는 성격인 만큼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수적
 - ⇒ **지자체의 주거관련 부서가 전담조직에 속하여야 하는가**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조직 및 제공기관과의 협력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기관의 고유 업무시스템을 활용한 연계, 전문 관리기관에 대한 위탁, 신규시스템 개발 등 구체적인 구축 방식과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으로 규정할 필요
 - ⇒ **최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 규정, 단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 연계에 중점**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국내 사례

- 택내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일상생활 지원(식사, 복약, 운동 등)(2020년, NIA)
 - 생활관리사와 AI 돌봄 로봇 협업(현,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AI 스피커 활용한 돌봄 서비스(경상남도-S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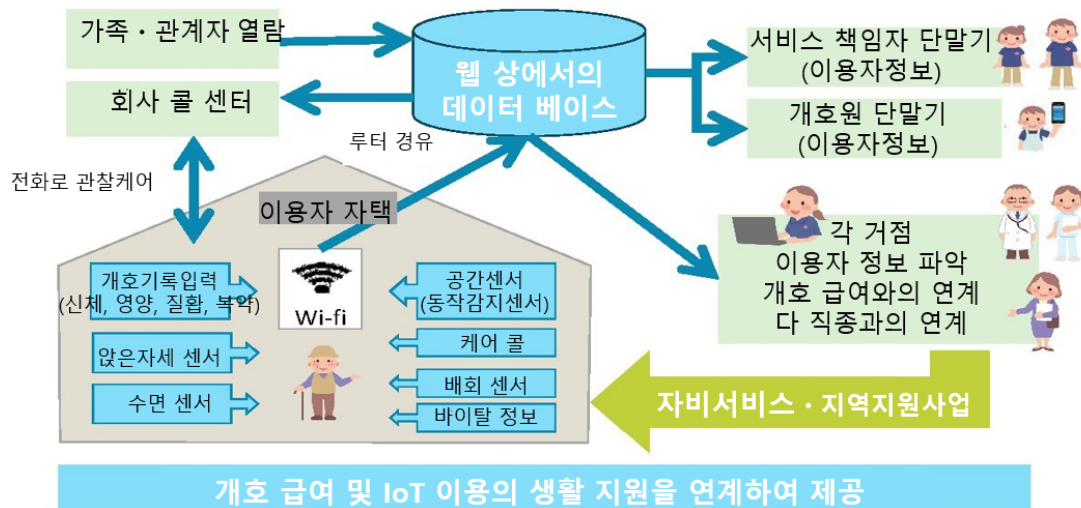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국외(일본)

- IoT(Internet of Things) 기기와 개호 서비스 욕구를 복합한 사례
-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의 IoT 기기 ‘관찰케어 라이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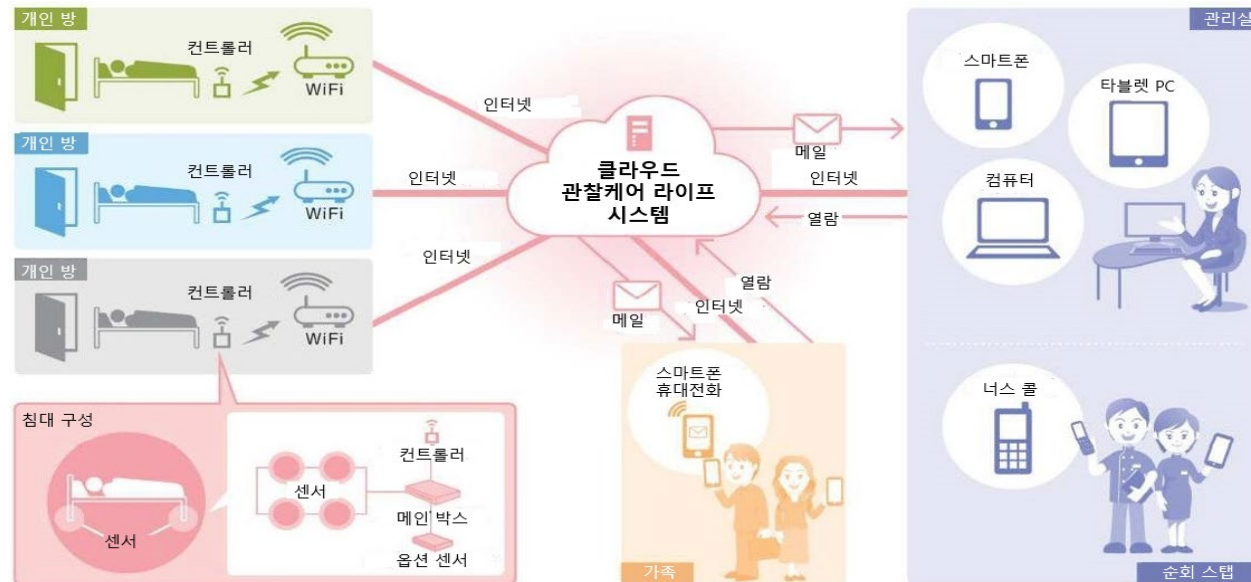
IoT생활지원 →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

IoT (Internet of Things)는 물건에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것.
IoT 기기에 의한 생활 지원과 개호급여와 통합하여 재택 생활 지속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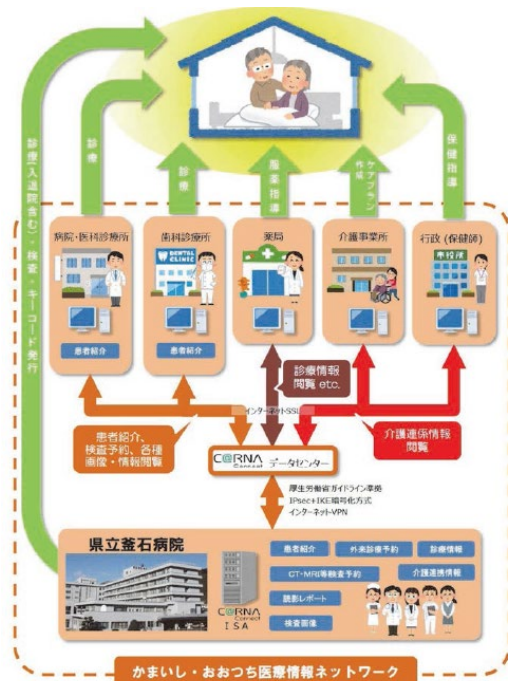
고령자 IoT 관찰 케어 지원 서비스 “당신에게 안심” 소개

실은·습도·조도의 관찰 케어
떨어져 사는 가족의 안심
“당신에게 안심”™ 간단하고 편리한 관찰 케어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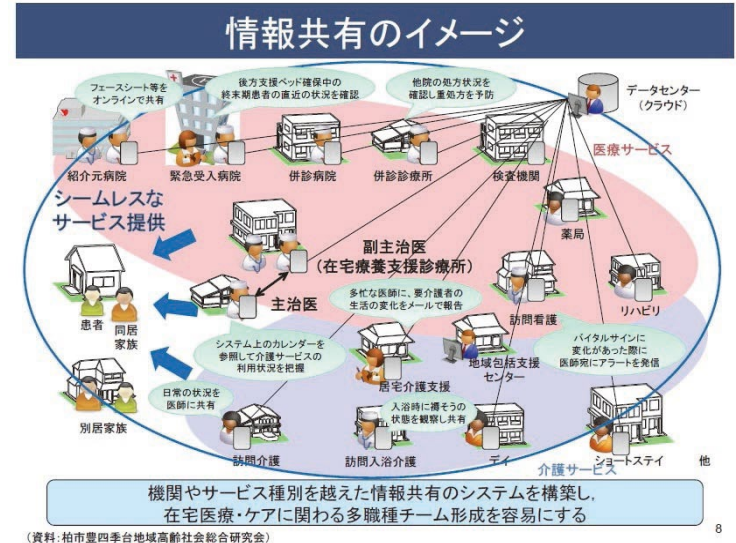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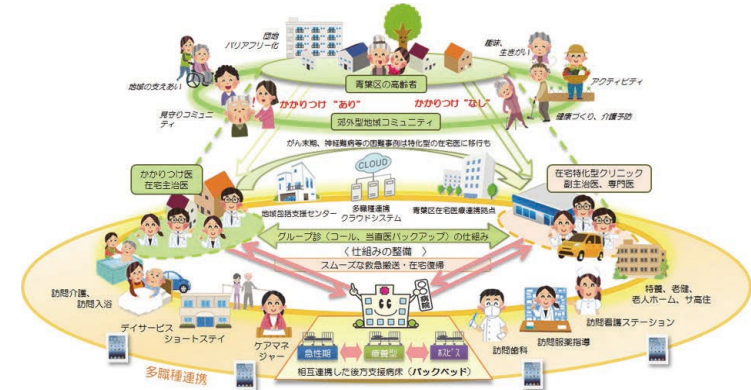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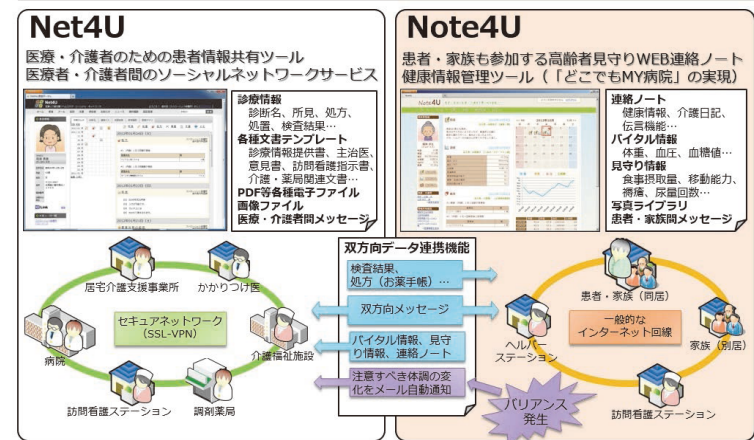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지역기반의 연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관리자, 제공자, 이용자 모두 이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 현장의 서비스 계획과 제공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조정과 협력 지원
 -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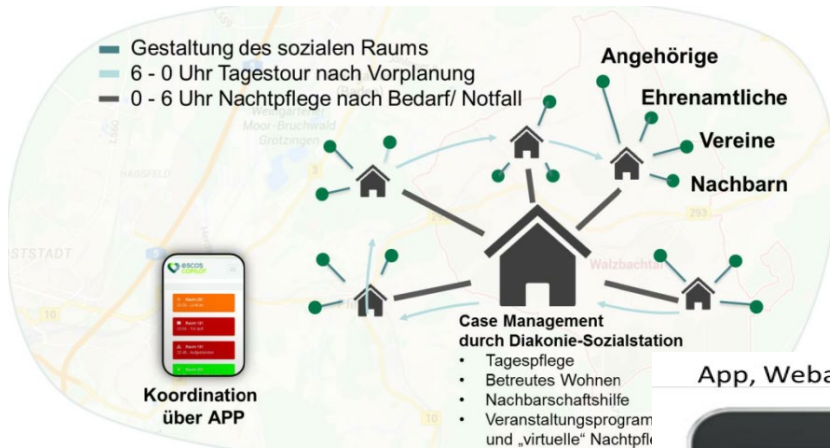
Net4U의 새로운展開 ~患者・家族が参加する在宅ケア~
在宅高齢者の急変・重症化予防を目的とした、在宅高齢者見守り機能（高齢者見守りパス）を導入します。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국외(독일)

- 상시재가돌봄을 위한 발츠바흐탈러 모델(Walzbachtaler Modell für 'Ambulante rund-um-die-Uhr Betreuung')



App, Webapplikation, Alarmierung auf (Mobil-)Telefon



행동감지장치

- 활동여부 감지 및 지원
- 독립성지원, 높은 안전감



안내등

- 낙상방지, 침대안내 도움
- 독립성지원



낙상인지(욕실)

- 후속피해예방
- 독립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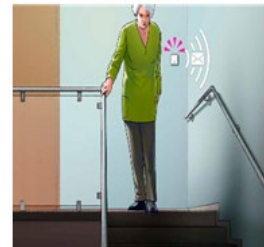
현관문 알림

- 문 열림 알림
- 수발인력 안도감
- 스트레스 감소



일어난 알림(침대)

- 낙상방지
- 후속 피해예방
- 스트레스 감소



위험지역 알림

- 신속 대응가능
- 손상방지
- 높은 안전감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논의 사항(계속)

• 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와 지자체가 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점도 특징적
 - 연구소 및 대학에 대한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 지정이나 정부의 인력 양성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포함
- ⇒ 주거에 관한 지원 역량을 갖춘 인력의 교육과 양성 필요성(일, 주환경코디네이터)

• 전문기관의 지정

- 통합지원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분석 및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담당
 - 전문기관은 사업 평가지원,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조사기준 개발, 종합판정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지, 하나의 기관일지, 역할에 따라 복수의 기관이 될지 쟁점
- ⇒ 주거 관련 기관의 전문기관 지정 가능성

8. 통합지원 기반 조성

- 시행규칙(안)
 - ‘통합지원회의’에 ‘주거 분야 전문가’ 참여하도록 명시
 - 시행규칙에서 유일하게 주거 명시된 부분

제12조(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①법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장은 법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기관의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그 밖에 지역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 전문가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III. 돌봄통합지원의 주거지원 활성화 과제

1. 돌봄통합지원의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및 관리

- 돌봄통합지원에서 규정한 주거,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방식
 -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거관련 부분 구체화, 관련 법과의 관계 설정 필요
 -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모든 관련 서비스를 규정하는데 한계 존재, 오히려 관련 법에서 접근 현실적
- 지역의 주거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 조정할 수 있는 관리운영 체계 마련 검토
 - 전국단위에서의 공통적인 것(표준)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특화) 구분하여 접근
 - 통합지원 대상자 만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이들을 포괄하는 서비스 구분
 - 관리운영 주체와 제공방식에 따른 구분 등
- 지역의 주거지원서비스, 관련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 돌봄통합지원 본격 시행에 따른 광역 및 기초의 주거관련 공공 및 민간 조직에 대한 공통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돌봄통합지원의 주체는 기초지자체, 정부와 시도의 지원과 함께 재정적 권한과 책임 부여
 - 단, 지자체가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 기본적으로 계획(예. 중기계획)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1. 돌봄통합지원의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및 관리

■ 지역사회 협력 기반 확충, 협력적 활동 추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로컬 거버넌스 추구
- 주거관련 사업 추진에서도 정부와 광역, 기초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수직적 체계는 곤란
- 지역사회 의료, 돌봄 등 관련기관과 협력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주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회의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 보장
- 이미,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규정에 명시(제한적이기는 하나)

2. 주거지원서비스 세부 기준 및 절차

- **통합 대상자 선정은 개인 단위와 함께 가구 단위에서도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
 - 1차적 돌봄관계가 붕괴하기 이전에 이를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것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실현이나 재정적 부담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
 - 예, 치매상태의 노인 개인도 있으나, 그 치매 노인을 돌보는 자녀나 배우자,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
- **대상자 선정에서 주민등록지 중심의 지역 거주기준을 완화해줄 필요**
 - 통합지원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통합지원은 전국적인 사업인 것도 분명
 - 예. 돌봄을 이유로 자녀 근처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소위 확대수정가구
 -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각 지자체들이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이유로 미루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협력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함
- **통합지원과 함께 각 사업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 및 제외에 관한 지침을 개편해야 함**
 - 현재, 각 사업들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각 사업과 기관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를 고려한 것은 아님
 - 현장은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로 인해 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안내나 지침에 대상자 중복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병기하고 있는 상황
 - 예. 특정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타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
 -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제공기관과 사업의 선정기준이 충돌해서는 곤란
 -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수준 만이 아닌 연계와 협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재정비가 시급

2. 주거지원서비스 세부 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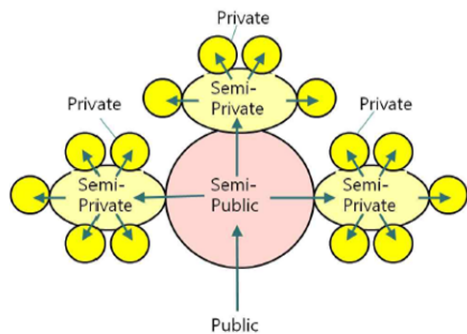
■ 통합지원에서 주거와 관련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과 보급

- 노인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평면으로 규정
-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특히, 노인주거, 생활, 입소 등 시설에 대한 기준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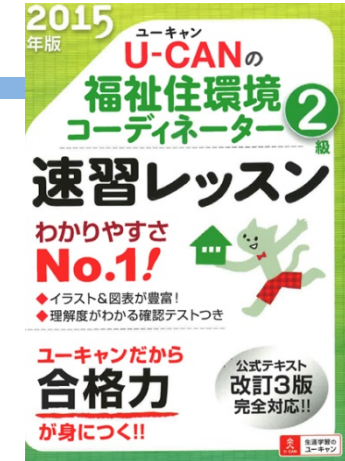
- 예) 일본의 '복지주환경코디네이터' 자격과 매뉴얼, 지침 내용

유니트케어의 구성(거주>요양>관리 단위 / 사적-공적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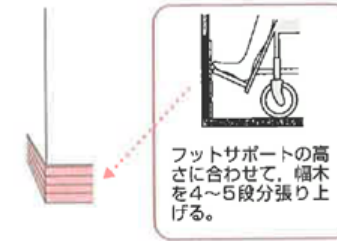
〈그림 2-5〉 공간의 단계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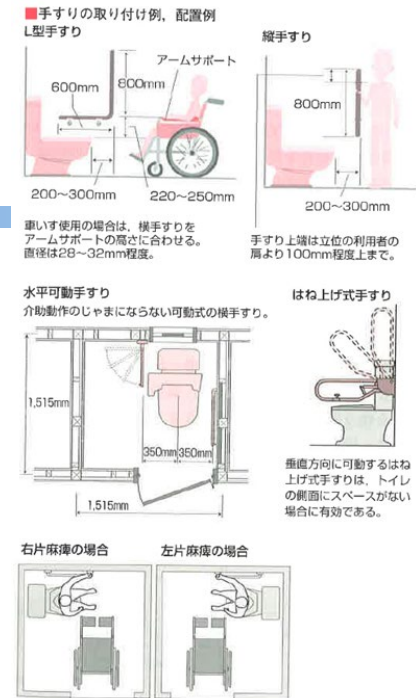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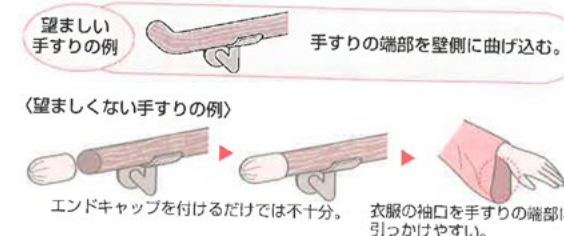
출전 : Newman O.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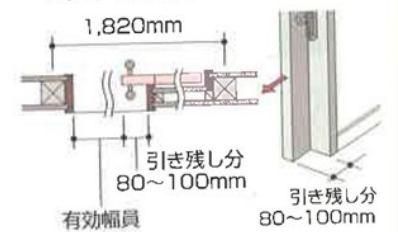
■ 「車いすあたり」としての幅木の設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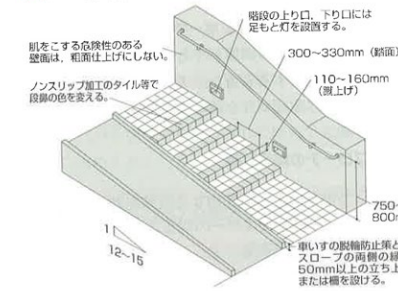
■ 手すりの端部の形状



■ 引き戸の有効幅員(突出した形状の把手の場合)



■ スロープ、階段設置の留意点まとめ



3. 주거지원서비스의 지향점

■ 재가, 주택은 노인의 주거공간임과 동시에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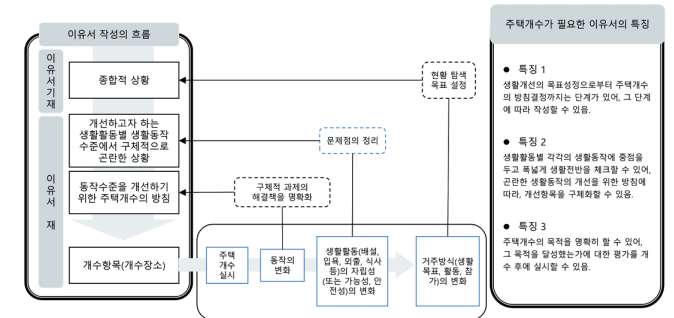
-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보수, 집수리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지역사회에 참여, 활동을 진행
-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업(방식과 품목)을 추진, 노인의 특성과 향후 변화, 돌봄 환경으로서 기능 반영 미흡

• 예) 협력사업의 사례(대전)

- 지하세대의 이동손잡이 설치
- 시각장애인 자택의 문턱 제거 등 이동 편의 제공
- 농가 주택의 경사로 설치

• 예) 일본

- 개호보험 주택개수(介護保険住宅改修)는 요개호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지원, 또한 사고방지나 개호부담의 경감 등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
 - » ①생활동작의 자립촉진, ②개호의 경감, ③지역사회로의 참가, ④개호비용의 경감
- 주택개수에 대한 사업자 사전신고제, 등록제 실시



*출처: 사단법인 실버서비스진흥회, 주택개수가 필요한 이유서 작성 안내.



4. 노인 주거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 설정

■ 개별 대상이나 사업 단위를 포괄하는 중장기 방향 제시 필요

-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성과 정리, 향후 방향을 변화하는 인구사회 및 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검토
-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향 설정,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공유, 협력적 활동 전개 기대
 - 예) 일본
 - 고령자 부양 세대에 대한 지원중심(1960년~1970년): 고령자와의 동거를 상정하는 ‘3세대를 위한 주택(페어주택)’의 공급
 - 고령자 주택지원정책의 법제화와 제도화(1980년대)
 - » ‘공영주택법’이 개정되어, 고령자가 공영주택으로 단신(1인) 입주 인정
 - » 1986년에 ‘지역고령자 주택계획 책정사업’ 창설(기초 단위,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정비를 보건과 복지정책과 연계)
 - » 1987년에는 주택과 복지정책을 연계하여 ‘베리어프리 주택’과 ‘생활원조원’ (生活援助員(LSA: 라이프서포트어드바이저))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공적 임대주택으로 ‘실버 하우스 프로젝트’ 시행
 - 본격적인 고령자 주택정책 시행(1990년대)
 - » 1990년 건설성(현재의 국토교통성)은 ‘시니어 주택공급 추진사업’ 제도화, 고령자 생활지원서비스제공 주택의 공급 시작
 - » 1991년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주택공급공사가 고령자에게 재임대하는 ‘고령자 임차 공공임대 주택제도’ 시행
 - » 주택의 ‘베리어프리화 시책’도 1990년대에 본격화되어 신설하는 모든 주택에 있어서 일정한 고령화대응방법이 표준화되었고 기존의 공영, 공단, 공사주택도 개선사업 진행

4. 노인 주거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 설정

- 1990년에 후생성(현재의 후생노동성)과 건설성의 연계에 따라,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택증개축. 개호기기 상담제도’가 제도화
- 일본 전국에서 고령자통합센터 및 주택개호지원 센터에서 상담업무가 시작되었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보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 1994년 건설성은 ‘생활복지 공간만들기 계획’을 책정하여 “주거를 복지의 기본적 인프라로 자리매기고, 전생애를 통한 안정과 여유가 있는 주생활을 실현한다”라는 비전을 내걸고 이하와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
 - » 고령자. 장애인의 신체상황에 맞춘 베리어프리화의 추진
 - » 고령자 대응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촉진
 - » 복지기기의 연구개발, 복지기기를 사용하기 쉬운 주택의 기술개발
 - » 공적 임대 주택에 있어서 고령자. 장애인의 입주 우대
 - » 고령자. 장애인의 민간 임대주택 입주의 원활화
 - » 실버하우징 및 민간의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촉진
 - » 다세대 거주 촉진
- 1990년에는 ‘주택 품질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에는 ‘주택성능 표시제도’가 시행
 - » 10개 항목의 성능표시사항 중의 하나로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사항’이라는 항목이 설정

4. 노인 주거에 관한 종합적 정책방향 설정

- 고령화대응의 핵심정책으로 위치한 고령자 주거정책(2000년대)
 - » 2001년에 ‘고령자의 주거 안전확보에 관한 법률(고령자 주거법)’이 제정되어, 고령자가 안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정비를 자가와 임대주택의 2가지 시장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 » 2006년 새로운 주택정책의 헌법이 되는 ‘주생활 기본법’이 시행되어 일본의 주택정책은 ‘양을 늘리는 정책에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
 - » ‘주생활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정부와 도도부현에는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향후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대응해야 하는 시책 등을 정한 ‘주생활 기본계획(전국계획. 도도부현계획)’을 책정하여 추진
 - » 2006년에는 종래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 가능한 특정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비루법)’과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 베리어프리법)’을 통합. 확충한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베리어프리법)’이 제정, 시행
- 고령자 주거의 사회화 진행(2010년 이후)
 - » 2011년에는 개정 ‘고령자주거법’이 시행되어 ‘서비스제공 고령자주택’의 등록제도가 창설
 - » 기존의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신하는 것으로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지지하는 주택과 서비스가 일체적으로 제공되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주택의 정비를 목표



**돌봄통합지원의 주거, 주거지원서비스의 연계 협력과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